

[별첨 1] '2024 기후총선프로젝트' 에서 제안한 12 대 제안 내용

부문	공약 의제	제안 내용 및 요구사항
시민을 살리는 탄소중립	① 도시부터, 빈 곳부터!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및 RE100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베란다 미니 태양광(지자체), 자가용 가정 및 마을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 예산 최소한 3배 확대 및 분산에너지법 개정 추진 • 도로, 주차장 등 공공부문 유휴부지 발굴을 통해 시민참여형 펀드 조성 및 일정 규모 이상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, 산업입지법 개정 등 추진
	② 폭염, 한파 등 재난 대비는 미리미리! 기후적응 인프라 예산 대폭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되는 재난약자(여성 및 취약계층 등)를 위한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 및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예산 확대 • 도시 속 홍수, 폭염 등 기후재난을 줄이는 도시숲의 보전과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도시숲 예산 3배로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예산 확대 추진
	③ 미세먼지 줄이고 기후변화 막는! 대중교통 1만원 패스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수요관리 4.5%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이외에도 대중교통 확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• 시민들의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의 접근성 및 공공성 강화, 인프라 확대를 위해 월 1만원 무제한 패스 도입 등 대중교통법 개정 추진

	<p>④ 찢끔찢끔 시늉만 내는 것은 그만! ‘에너지 복지 예산’ 3 배로 확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행 ‘에너지바우처’ 제도는 기초수급 세대에 연간 34만원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• 차상위계층을 대상에 포함하고 및 지원 규모도 연간 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예산을 3배 늘리고(6,800억원 → 2조원) 에너지법 개정도 추진
<p>지역을 살리는 탄소중립</p>	<p>⑤ 지역 공동체와 경제 살리는!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분별한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 추진 및 미래 먹거리인 해상풍력 인허가 간소화(One-Stop Shop) 특별법 제정 추진 • 주민참여 방식 확대 및 지역사회 기금, 현물 편익, 전기요금 지원 등 이익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
	<p>⑥ 정의로운 전환, 지금부터 시작!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30년 기준 모든 국내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은 탈석탄법 제정 추진 • 탈석탄 지역을 ‘정의로운 전환’ 특구로 신속 지정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 구축하고 현행 12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최소한 3배로 확대
	<p>⑦ 농촌 인구 감소 막고 지역 활성화 위한!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사 수입 이외 태양광 판매 수익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마을형 협동조합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 •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, 임차농 참여 가능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

	<p>⑧ 탄소흡수원을 지키고 늘려가는! 자연자원총량제 도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림 면적 축소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연자원 총량제(Biodiversity offset)를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추진 • 산림 보전에 기여하는 지자체와 주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‘생태계서비스 지불제’ 대폭 확대
<p>산업/일자리를 살리는 탄소중립</p>	<p>⑨ 재생에너지 후퇴 안돼! RE100 지원을 위한 2030년 보급 목표 재상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(발전량 비중 30% → 20%)로 인해 국내 태양광 시장 축소 및 사업장 폐쇄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• 보급 목표 재상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하고,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혁신 특별법 제정 추진
	<p>⑩ 신기술 타령은 이제 그만!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는 ‘30년까지 연간 에너지 효율 2배 강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, 국내 시장 규모는 오히려 지속 감소 중 (’13년 3,166억 → ’22년 705억) •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매년 5%씩 강화하고 세계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 추진
	<p>⑪ 지속가능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! 한국형 IRA 법안 제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국/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공격적으로 세계 혜택 및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제정, 추진 중 • 재생에너지, 2차전지 등 친환경 신산업 육성 및 전. 후방 공급망 강화를 위해 보조금 및 세계 혜택을 골자로 한 한국형 IRA 특별법 제정 추진

	<p>⑫ 지속가능한 재정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!</p> <p>배출권거래제 강화 또는 탄소세 도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기 제안한 의제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• 유상할당 강화를 통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위해 배출권거래법 개정 및 탄소세법 제정(중장기), 기후대응기금 예산 3배로 확대(2.4조 → 7조)
--	--	--